

제주 근·현대사에 대한 성찰적 인식

- 저항사에서 수난사로

현길연(전 한양대 교수, <본질과현상> 발행인)

1. 문제와 방법

19세기 말로부터 해방공간에 이르기까지 변방 제주에서는 수많은 변란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 제주사람들은 엄청난 고통을 당했다. 그 중에도 1901년에 온 섬을 살육의 도가니로 만들었던 이재수 난¹⁾과 1948년에 일어난 제주4·3사건²⁾은 주변지역의 사회문화의 특수성을 제시해주는 특이한 사건이었다. 특히 제주4·3사건에 대한 인식은 서로 상반될 뿐만 아니라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도 미완으로 남아 있다.

80년대 이후 한국사회가 민주화되면서 권위주의 시대에 경직된 연구 환경이 완화되고 소위 진보적 세계인식이 연구에 크게 작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학문의 방법론에 대해 반성적 의미를 갖게 되었으나, 학문 연구가 정치 상황의 변화와 맞물리게 되면서 또 하나의 경직성을 낳게 되었다.

세계 현상과 인간의 역사를 연구하는데 다양한 연구 방법이 요청되는 것은 연구가 자아와 세계의 실상에 다가가는 과정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연구의 결과와 방법론은 항상 성찰의 대상이 된다. 또한 연구자는 세계에 대하여 치열하게 인식하고 그 결과를 정직하게 전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그런데 이러한 치열성과 정직성을 가로막는 것이 이데올로기와 상업주의이다. 그 중에 '민족'이라는 '공동선'에 가까운 이데올로기가 연구의 치열성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허위의식을 포장하는데 적절한 도구가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글에서는 '이재수 난'과 '제주4·3사건'에 대한 최근의 일반적인 인식에 대하여 성찰하려 한다. 이 두 사건은 근대 이후 한국 사회 상황과 제주의 주변성이 묘하게 어우러져 변동기 주변지역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동시에 당대의 지배 이데올로기와 그 정치성이 역사적 사실을 인식하는데 어떻게 작용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시사해 줄 것이다.

어떤 역사적 사건에 대한 인식이나 해석은 역사관에 의해 결정되지만, 그보다 먼저 연구자는 세계에 대해서 치열하게 인식하고 얻은 자료의 선택과 해석에 대해 정직함이 우선한다. 연구자가 현실적인 이해 관계에 따라 정치적 상황이나 대중적 시류에 편승해서는 연구

(1) 천주교에서는 '신축교난(辛丑教難)'으로, 기념사업회 측에서는 '1901년 제주항쟁'이라고 한다.

(2)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에 역사바로잡기 일환으로 추진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의 공식 명칭이다. 일부 소위 진보적인 입장에서는 '제주4·3민중항쟁', 과거 권위주의 시대 소위 우익적 입장에서는 '제주4·3폭동'이라고 했다.

의 결과 지배 이데올로기가 세속적 가치를 설명하는 수준에 머물게 될 것이다. 한국의 근·현대사회처럼 정치 상황의 변동이 심한 경우일수록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인식이 논쟁거리가 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 중학교 국사교과서 집필에서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용어 때문에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도 그 한 예이다. 60년 넘게 분단 체제가 고착된 상황에서 이데올로기 위력이 더욱 거세다. 이러한 학계의 경향은 제주의 두 사건을 논의하는데도 크게 작용했다.

이 사건은 저항사적 입장과 수난사적 입장으로 접근할 수 있다. 저항사적 입장은 명분론에 치우칠 우려가 있고, 수난사적 입장은 몰 주체적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기에 주변적인 상황에서 살아온 제주인의 입장에서는 명분론이 우세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주변에서 중심으로 도약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명분을 안겨주는 하지만 진실이 외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저항사적인 역사 인식이 우리 스스로를 극복하고 아픔을 치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 두 사건을 이해하는 데는 제주 문화의 특징인 '주변성'을 간과할 수 없다. 이념 지향적인 중심부 역사와는 달리 삶의 실천성을 중시하는 주변성이 이 사건들을 이해하는 논거가 될 것이고, 그러한 이해가 제주사람들의 고통스러운 과거를 정직하게 성찰하고 극복하는 데도 유효할 것이다.

2. 역사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이해

(1) 삼별초³⁾의 항몽정신

유신 말기에 민족이데올로기를 앞세워 민족 수난의 사적을 정화하는 일들이 정부 주도로 추진되었다. 제주에서도 삼별초 유적을 '抗蒙遺蹟地'라 하여 그 정화사업을 요란스럽게 벌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그러한 정부 주도의 사업이 역사적 진실을 회복하려는 의도이기보다는, 정치 이데올로기를 교육하고 강화함으로 정치적 목적을 위한 조작이었음이 밝혀졌다.⁴⁾ 그러나 지금도 삼별초의 항몽에 대해서 누구도 문제 삼지 않는다. 그것은 삼별초 사적이 민족 이데올로기로 포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역사에서 최초로 왕권을 거역하고 새로운 왕조를 세운⁵⁾ 삼별초 집단이 제주에서 여몽 연합군에 대항한 역사적 사실이 민족적인 입장에서 '항몽'인지 따져 봐야 할 것이다. 또한 제주도민의 입장에서도 삼별초군의 입도로 당했던 고통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그들로 인해 제주가 200여 년 간 몽골의 지배를 받았다. 즉 이 사태는 외부 세력에 의해서 도민이 겪었던 수난사의 시작이었다. 이렇듯이 삼별초 유적지 정화사업은 정치적 목

(3) 삼별초를 도민의 입장에서 논의한 김태능의 두 편의 글이 있다. 「耽羅와 三別抄」 「몽고의 탐라지배와 최영장군의 牧胡討伐」 『제주도사논고』 (비매품, 1982)

(4) 본인은 이 삼별초 정화사업과 관련하여 장편 「어떤 역사학도의 죽음」을 썼고, 이를 다시 『투명한 어둠』 (나남, 1998)으로 개작하여 간행했다.

(5) 고려 원종이 그 동안 몽고에 대항해온 삼별초군의 해산을 명하자, 원종 정부를 괴뢰라 규탄하고 배중손 등이 승화 후濫을 옹립하여 왕으로 세우고 진도에 들어와서 독립왕국을 세웠다. 김태능 윗글, p.30.

적에 의하여 역사적 사실을 이데올로기화한 예가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민족 이데올로기’가 강력한 힘을 발휘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0여 년 시간이 지나 민주화시대가 되어도 ‘삼별초의 항몽’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은 민족 이데올로기 힘 때문이다.

(2) 이재수 난과 저항의 논리

1901년에 일어난 ‘이재수 난’(辛丑教亂)도 도민의 입장에서는 수난의 역사이다. 최근에 이 사태를 소재로 영화가 제작되었고, 다양한 문학 양식으로 창작되기도 했다.⁶⁾ 이 사건은 천주교 세력이 국내에서 지위를 확보함에 따라 일부 교인들의 불법적 행태로 야기된 주민과의 갈등과 중앙정부의 부당한 조세정책과 이를 집행하는 봉세관의 횡포 등 외세와 불의 부패에 저항하여 일으킨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다.⁷⁾ 그런데 이 사건도 당대의 복잡한 사회 갈등 구조와 다양한 이익집단이 얽혀져서 일어난 사건으로, 외세와 부정부패에 대한 항거라고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사건은 1900년 당시 제주의 복잡한 사회 상황 즉 외래 종교의 세력이 확장됨으로 인한 토착 유림 세력, 토착 신앙과의 갈등, 상무사와 일본 상인 세력과 천주교의 마찰 등 복합적인 역학관계가 얽혀있다. 그러한 와중에 고통받고 살아온 백성의 원한이 폭발하여 사건은 확대되었다.

사건의 절정은 이재수가 이끄는 자위민단(自衛民團)이 제주성에 입성하여, 성내에 있는 천주교인을 색출하여 죽이는 상황이다. 이재수를 따르던 소위 자위민단이나 이에 맞서는 교도들은 당시로서는 모두 억압받고 살았던 제주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어제까지도 이웃이었다. 교인들 중에는 교세를 업고 그 동안 당한 억울함을 해소하려 불법적인 일을 자행한 사람도 있었다. 성내에 진주한 자위민단은 교인들을 재판할 거치지 않고 마구잡이로 살육해 버렸다. 죽인 자나 죽임을 당한 자 모두 가슴에 쌓여 있는 분노가 폭발된 것이다. 이러한 싸움은 제주사람에 의하여 그 원인이 제공된 것도 아니었다. 제주사람들의 자발적인 저항 의지에 의한 싸움도 아니었다. 이재수는 당시 한 마을의 이강(里綱)에 불과했다. 그는 아마 세상의 불법에 대해서 의분을 품었을 것이고, 교인들의 행패를 참지 못했을 것이고, 천주교와 갈등을 빚고 있는 여러 세력들과도 일정 부분 관계를 맺었을 것이다.

이 사건을 수난사로 보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건의 피해자는 어느 쪽이었던 제주에서 한스럽게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프랑스 신부 측이나 상무사의 주역이었던 자들은 큰 화를 입지 않았다.⁸⁾ 이 난의 시발은 상무사와 천주교인들의

(6) 대표적인 작품은 현기영의 장편소설 『변방에 우짚는 새』

(7) 이 사태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다.

김태능, 「성교난 사건과 삼장두의 공술내용」 (앞책, pp.500-508)

조현범, 『문명과 야만』 (책세상, 2002)

1901년 제주항쟁기념사업회 엮음, 『신축제주항쟁자료집』 I, II(각, 2003). 『자료집 I』에는 「평리원판결문」 「속음청사」 「제주목사 보고서」 「삼군교폐사실성책」 「삼군평민교민물고성책」, 『자료집 II』에는 설화, 이재수 실기, 시나리오, 희곡, 시, 논문 2편이 수록되어 있다.

(8) “민요의 일어남은 점차 상무사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피고 등이 모두 상무사에 참여하였으므로 또한 모두 용서하기 어렵다” (위 자료집, 평리원판결문(피고 마참삼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사태가 상무사와 천주교 간의 갈등에서 시작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는데, 상무사의 주역이었던 대정군수 채구석이 책임을 면할 수 없었다. 이 소요가 대정군 지역에서부터 발발하였고, 관의 기물을 빼앗겼고 민(民)교(教)의 소요를 막지 못한 죄로 태 90, 징역 2년 반 형에 처하였

갈등에 있었음을 생각할 때에, 앞장서 싸웠던 양쪽 백성들은 결국 대리 싸움꾼에 불과했다.

대정의 부유리(副由吏)가 좌수를 지낸 오대현의 기생첩을 불러 끌어갔는데 이 일을 관에 고발하게 되었다. 부유리는 입교한 사람이었는데 대정군수는 간인처첩(奸人妻妾)의 죄로 태형 30대를 집행하고 가두었다. 교민들이 말이 있을까 염려하고는 역시 오좌수에게도 매 15대를 치고 방면하였다.

교인인 김 진사는 일당 50명을 모아 읍으로 들어가니 대정군수에게 교인을 매 때리고 가둔 까닭을 대면하여 힐문하였으며, 또 말하기를 “소위 상무사는 우리 성교와는 적이 되려고 하여, 우리 교인들이 또한 가입하여 참가하려 하면, 대정군수는 (가입여부를) ‘모르겠다 하며 피해버린다고’고 하였다. 김은 옥을 열어 부유리를 놓아 내보내고 상회민(商會民) 몇 사람을 붙잡아 갔다. 상회는 이 소식을 듣고 일당을 거느리고 길에 매복하였다가, 붙잡힌 사람을 구출하고 교인 7, 8명을 구타하여 그 중 두 사람이 거의 죽음에 이르렀는데---9)

이 기록은 소요 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에 일어났던 일이다. 상무사와 교인들 사이에 갈등이 심했음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이 외에도 김윤식은 당시 제주에는 천주교와 기존 지역 세력 간의 갈등이 팽배해 있음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제주도 전역에서 해상 조업권을 갖고 있던 일본인들도 교인들의 세력이 부담이 되면서 소요를 부채질하면서 민회를 후원하였다.¹⁰⁾

또한 천주교도들 중에는 신부의 힘을 믿고 무법으로 횡포를 부렸던 자도 있었지만, 진실된 교인들도 있었다. 이들은 단순히 교인이었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 그들 중에는 교인이 되기 전에는 사회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였고, 열심히 일해도 끼니를 채울 수 없는 가난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은 교인이 된 후에, 마을 세도가들과 관계가 좋지 않았다. 경우에 따라서는 돈을 꾸어 갚지 않으면서 예전에 고리로 꾸었던 양갓음을 했고, 소위 지방에서 내노라 하는 사람들에게 당한 굴욕을 되갚기도 했다. 천주교인들의 횡포와 불법¹¹⁾은 지금까지 그들이 당했던 한스러운 삶을 되갚음 하는 경우도 많았다.

둘째, 싸움은 처음부터 외세와 부패세력에 대해 저항하려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시작하지 않았다. 단순히 천주교인들에 대한 불만과 그들을 제압하지 않았을 때에 당한 위협을 생각해서 일어났다. 싸움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차츰 세력이 조직화되었고, 이에 위기의식을 갖게 된 교인들 측에서도 세력을 규합하여 대항하게 되면서 싸움은 더 격렬해졌다. 자기

다. (채구석) 판결선고서 46호 (자료집 I, pp.20-23) 그런데 판결 이전에 채구석의 처리는 한국정부와 교회 사이에서 예민한 문제여서 정부는 뉘틸 주교에게 그의 석방을 부탁하였다.(자료집, 해제)

(9) 김윤식, 「속음청사」 『자료집 I』 p.61.

(10) 교인들이 일본인들에게 무기를 구하려 하면 들어주지 않았는데, 민회 중에는 서양총과 사냥총을 갖고 있었는데, 이것은 일본인으로부터 구입했다. 일본인들은 전도에 걸쳐 잠수기선으로 해산물 채취권을 갖고 있다. 김윤식, 『유헌』, p.78.

(11) 대정군 교폐의 유형을 보면 모두 48건인데, 이 중에 토지 조세 수탈이 21건 제일 많고, 그 외에 금전 탈취, 부채 안 갚기, 입교 강요 토속신앙 배척들이다. 『자료집 I』 pp.8-10.

방어적 집단성, 분노, 상대에 대한 저주 등등 감정적인 것이 많이 작용했다. 싸움은 서로가 살아남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민회 측에서는 신부가 본국에 전함을 요청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전함(戰艦)이 들어오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위기감을 갖게 되었다. 교인들 측에서도 민회가 성안으로 들어오면 살아남지 못할 것을 알고는 신부의 세를 의지해서 성을 지키려고 했다. 이제 싸움은 명분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마지막 수단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이 사건을 저항사적 관점에서 접근할 때에 실체를 호도할 수도 있다. 서구 세력과 부패한 세정에 대한 저항이기보다는 삶의 현장에서 나타난 한과 불만과 계층 간의 세력판도가 사회제도 세력의 변화에서 오는 위기의식, 이를 부채질하는 주변세력들도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결국 싸움은 양측 모두 힘없이 살아온 백성들끼리 죽이고 죽는 피흘림으로 끝났다. 천주교가 세력화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기존 세력을 포함한 상무사와 천주교의 갈등 대립이 분노와 미움과 격분을 갖고 살아가는 백성들을 통해서 분출되었다. 결국 백성들은 모두가 희생자였다. 그 희생의 아픔을 저항사적 명분론으로 달랠 수는 있어도 그것이 역사적 진실이 아니라면 진정한 아픔의 치유가 가능할 것인가 생각할 문제이다.

3. 제주4·3사건¹²⁾에 대한 인식

(1) 제주 4·3 사건을 바라보는 입장들

제주4·3사건에 대한 이념적 인식의 틀은 이재수 난과 상통하는 점이 많다. 해방기 혼란스러운 정치 사회 상황에서 변방 제주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남한 단독정부 수립과 미군정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저항이라는 점에서는 외세를 배격하는 민족운동으로, 경찰과 군의 진압 과정에서 자행된 비인도적 처사에 대한 저항이라는 점에서 인권 저항운동으로 인식할 수 있다. 이것은 천주교로 대신하는 외세와 부패한 국내 관료 세력에 대한 저항이라는 이재수 난에 대한 이념적 인식의 틀과 상당히 근접해 있다.

민족 이데올로기와 인권은 저항의 명분을 세우는데 충분하다. 어느 시대, 어느 지역에서나 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최고의 선한 이데올로기'가 된다. 제주4·3사건을 이러한 입장에서 인식할 때에, 명분이나 실리 면에서 유리할 뿐만 아니라, 제주사람들의 자존심을 지키고, 피해를 당한 많은 사람들의 정신적 보상도 가능하다. 그런데 이 틀에서 사건을 인식할 경우에, 그 이념이 퇴색되어 버리면 그 진실성도 무너질 수 있다. 인권은 공동선이 될 수 있으나, 이념으로서 '민족'은 그 가치가 가변적이기 때문이다.

¹²⁾ 이 사건에 대해서는 다양한 용어가 쓰인다. 4·3폭동, 4·3사건, 제주4·3항쟁 등이 있다. 이 글에서는 노무현정부 출범 이후 국정 중점과제로 추진하였던 과거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정립할 목적으로 설립한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명칭을 그대로 쓴다.

제주 4·3사건은 해방 이후 미·소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한반도 상황에서 주변 지역 제주에서 일어난 특별한 사건이었다. 사건 발발 이후 60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에 대한 인식은 극과 극으로 대립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건에 대한 제주사람의 진정성은 어떻게 정립할 수 있을까? 사건 발발 이후 남북 분단이 고착화되는 상황에서 사건을 정직하게 인식하기는 쉽지 않았다. 정부 수립 이후 문민정부가 들어서기까지 (4.19 이후 몇 달은 제외하고는) 이 사건은 남로당이 주동하여 남한에 공산주의 정권을 수립하기 위해 일으킨 반국가적 폭동으로 인식했다. 경색된 남북 관계와 정치적 혼란기에, 집권자들은 정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반공이데올로기를 내세움으로 제주 4·3사건에 대한 인식도 그 틀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런데 그 당시 한편에서는 이와 달리, 이 사건을 아주 특별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이야기판이 마련되기만 하면 이 사건을 말하었는데, 그 때 누구도 분노하거나 증오하거나 자기를 고통스럽게 만든 그 대상에 대해서 탓하지 않았다. 그 사건은 마치 자신이 짊어져야 할 운명처럼 생각하며 이야기를 하거나 들었다. 이것은 취약한 주체의식, 굴종적 운명론, 강력한 이데올로기에 억압되어 살아오면서 학습받은 결과라고 생각할 수만은 없다. 이들의 이야기 태도처럼 그 사태에 대한 이념적 인식을 유보하는 것은 정치적 억압의 결과라고 하겠지만, 그 사건을 직접 체험했던 이들이 그 사건에 대해 말하고 듣는 그 태도는 매우 안정되어 있었다. 이러한 모습은 제주4·3사건에 대한 문학적 인식과 상통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하여 편차는 있으나 누구나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부분도 있다. 첫째, 4·3사건은 남로당과 그에 동조하는 자들이 주동이 되어 도민을 선동하여 일으켰다. 둘째, 사건이 발발되기 1년 전 3·1절 기념행사를 경찰이 과잉 대응함으로 일어난 불상사와 그 처리 과정에서 빚어진 일들이 도화선이 되었다. 셋째, 이 사건은 당시 대한민국이 처해있던 정치 상황의 결과이긴 하지만 중심부 지역(육지의 대도시)에서 일어난 사회주의 정치운동과는 성격이 다르다. 넷째, 이 사건은 제주의 특수한 역사성과 문화 전통성이 작용하여 특수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다섯째, 제주 사태에 대한 군경 합동 진압군의 진압 과정에서 반인권적 사태가 벌어졌다. 여섯째, 제주 사람들은 자기 선택과는 관계 없이 어느 편이 되었다.

제주4·3사건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도 극과 극에 있다. 첫째는 남로당이 주동이 되어 일으킨 한반도 사회주의 국가 건설의 전초전이 되는 국지전적 사건이라는 관점이다. 둘째는 단선정부 수립을 반대하고, 한반도 분단을 획책하는 미국의 정책과 부정부패가 만연한 혼란한 사회 상황에 대한 도민의 저항이라는 시각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직접 이 사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통감하고 희생자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면서 세계평화의 섬을 선포하는 자리에서 도민에게 사과했다. 그래서 제주4·3사건을 민족 인권운동의 차원에서 접근하면서 대대적인 홍보와 교육 교재로, 또는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고 교육하려는 의도로 다양한 사업을 펼쳤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정부 측의 입장을 정치논리로 이해하기도 한다.

이 사건은, 일제의 식민통치, 해방과 모스크바 삼상회의, 미소 중심의 냉전 체제, 중앙에서 멀리 떨어진 주변지역의 정치 사회 상황, 제주지역 문화 전통의 특성 등이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런데 당시 젊은 남로당원들은 한국의 공산화가 가능하다는 생각에서 투쟁을 벌였을까? 그들은 과연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된 혁명 의식을 갖고 있었을까. 사건이 확대되면서 정치 이념보다는 생존의 문제가 시급했던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싸우면서도 저항 의식을 유지하였을까? 그들이 왜 입산해서 목숨을 건 투쟁을 감행했을까? 이러한 의문은 사건이 종식된 이후 오늘까지, 그 사건을 생각하는 사람마다 갖게 된다.

의외로 진압군은 빨치산과 입산자에 대해서 무차별 공격을 감행했다. 입산자들은 진압군의 총부리를 피하기 위해서 해안부락으로 귀순하였거나 그럴 처지가 못되거나 기회를 잃은 사람들은 진짜 입산자가 된다. 산사람이 된 그들은 진압군의 토벌 대상이 되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입산자들은 생존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웃에게 창을 들이대었고, 이웃 사람네 곡식과 우마를 탈취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 이르자 입산자들은 이념보다 생존의 문제가 절실했다. 그 동안 주동자들은 섬을 탈출하였고 결국 나약한 자들만이 한라산에서 용감한 빨치산으로 최후를 마쳤다. 이들의 진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2) 저항의 논리

김영삼 정부가 들어섰을 때에 제주에서 개최된 '4·3 문학 세미나'에서 본인이 주제를 발표한 적이 있다. 그 때 제 발표에 대한 한 토론자의 논평이 기억에 남는다. 그는 '4·3 희생자'란 발표문의 용어에 대해 강한 불만을 말했다. 그들은 자신의 신념에 의해 싸우다 장렬하게 죽었으니, '희생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 논평자는 제주4·3사건은 38선 이남에 단선정부 수립과 한국 분단을 획책하는 미군정에 대한 저항이었기에, 그들을 '희생자'로 기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제주 4·3사건을 저항사적 관점에서 인식하는 것이 보편화되어서 수난사적 입장의 입지가 여간 궁색하게 되었다고 한다. 대한민국 대통령도 제주 4·3사건에 대해 '건국 초기 단선정부 수립이라는 부끄러운 역사에 저항한 사건'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결국 저항사적 관점이 이 사태를 인식하는 '마른 틀'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인식의 저변에는 정치 이데올로기가 작용했다는 것을 모두 인정한다. 저항사적 관점에서 이 사건을 바라본다면 상생과 평화를 지향하는 제주4·3사건진상조사위원회의 의도도 퇴색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저항사적 입장을 포기할 수도 없을 것이다. 만약 포기하면 그와 관련된 많은 정치 사회적 사안들과 맺어진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학문의 정치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논리는 이러한 세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죽거나 고통을 당한 사람들은 이러한 이념을 앞세워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누구나 수용할 것이다. '제주4·3사건 보고서'¹³⁾에 의하면, 사건이 격렬한 무장

(13)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2003. 앞으로 이 문서를 인용할 경

투쟁으로 치닫게 된 주요 원인으로 1947년 3·1절 행사장에서 일어났던 시위 군중에 대한 경찰의 발포사건과 이 일을 강경하게 진압하고 수습하려 했던 경찰과 미군에 일차적인 원인이 있다고 했다.¹⁴⁾ 그러한 해석이 진실이라면 사건은 정치적 의도에서 시작하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하다. 그런데도 이 사건을 굳이 저항사로 의미를 부여하려는 것은 논리의 모순이다. 3·1사건이 도화선이 되었다면, 그것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고, 문제를 야기한 경찰과 이를 조종한 미군정의 처사에 대한 극히 일상적인 반발에 불과하다. 이 3·1 발포사건을 잘 수습했다면, 제주4·3사건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제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결코 저항적 사건이 아니다. 사건으로서 저항은 저항할 가치나 대상이 있어야 하고, 그 세력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이념과 세계관이 정립되어 있어야 하고, 저항을 위한 치밀한 준비와 조직이 되어 있어야 하고, 투쟁을 통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전략이 구조화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제주4·3사건에서 저항적 측면을 강조한다면 그것은 사건의 중심에 남로당 조직과 그 조직원들이 주축이 되었기 때문이다. 3·1절 기념행사시 발포사건 이후 남로당에서는 당대책위원회를 조직하여, 기회에 전도적인 투쟁을 전개하려고 계획했으며, 3월 10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민관 총 파업을 감행하였다. 이 파업은 1946년 10월 전국적인 총 파업에 동참하지 않았지만, 제주도는 아주 적절한 시기에 감행한 전략적 사건이 되었다.¹⁵⁾ 이 사태는 “10월의 민족적 저항을 모델로 삼아, 그에 대항하는 대중운동을 노동당이 주도해야 한다”는 남로당의 지침과도 부합된다.¹⁶⁾ 이러한 투쟁 양상에서 그 저항은 남로당과 북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념 노선과 관련이 깊다. 그 점은 제주4·3사건의 지도부가 해주에서 개최하였던 남조선 인민대표자대회에 참석하여 제주 사태를 보고하여 열렬한 환영을 받았으며, 박헌영의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 대표선거에 대한 보고’의 토론자로 참여하였다.¹⁷⁾ 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에, 이들의 행동은 38선 이남에도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건설하려던 조선노동당의 혁명 계획과 일치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사항에서 제주4·3사건은 단선정부 수립과 미군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반대, 정치사회의 부정에 대한 저항으로 시작되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사태가 확산되고 전 도민이 가담하게 되면서 최초 봉기의 정치적 의도로만 사건을 이해할 수 없다. 사건의 주도 인물들의 저항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배치되는 것으로, 민주화운동과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

저항사로 보는 데는 사건 자체에 대한 정직한 인식보다는, 현재 이 사건에 대한 정부 당국이나 도민의 입장이 상당히 가세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이념이나 가치의 문제가 아니다. 저항이라면, 제주4·3 사건으로 고통당하고 죽은 사람들은 앞서 말한 대로 희생자가 아니며, 혁명전사자로서 전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그러기에 이들은 대한민국정부로부터 사과를

우에 '보고서'로 대신함.

(14) 이미 해방정국에서 남로당이 봉기를 위해 준비했으며, 그들은 중앙 정세를 잘못 파악하여(보고서, pp,146-156) 봉기가 성공할 것으로 믿었다.

(15) 제주지역에서 좌파 세력의 조직화 과정, 파업을 위한 조직과 활동과 실재를 구체적으로 읽을 수 있다. 보고서, pp, 83-108

(16) 존 메릴, 「한국의 내란, 1948-1959」 브루스 커밍스 외 『한국전쟁과 한미관계』 청사, 1987. p,175

(17) 중앙일보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하) 중앙일보사,p,382.

받을 수도 없으며 위로의 차원에서 공원 건립도 의미가 덜하다. 만약 그 사태에 변을 당한 사람들이 저항의 대열에서 그 어려운 싸움을 결행하였다면 그들은 결코 대한민국정부가 제정한 보상법에 의하여 위로받고, 위령제를 받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그 일은 남과 북이 서로 합쳐 제3의 민족국가가 건설된 다음에나 가능한 일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4·3의 발발 원인과 그 경과에서 빚어진 슬한 비극적 사태를 정직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직하려면 명분주의와 감상적 인식 그리고 어떠한 이해관계를 버려야 한다. 정직은 어려운 양심의 결단에서만 가능하다. 내가 당하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 내 생각으로 내 가치와 이념으로 또는 작은 이해에 얽매어 그 정직을 외면하고 사태를 왜곡되게 인식하고 처리해서는 안 된다. 그 당시 사람들의 처지로 돌아가 사태를 이해해야 한다.

(3) 증언의 자료의 한계

4·3사건의 실상을 밝히는 데 증언자료가 많이 기여하고 있다. 증언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도 있으나 자료로서의 증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을 때에 오히려 실상을 흐리게 할 수도 있다. 증언은 사건의 주인의 진실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증언자)의 생각을 전하기 위한 언어이다. 과거의 언어가 아니라 현재의 언어이다. 그것은 기억에 의지하는데, 기억은 언어 주체자의 의식과 상황과 다양한 조건에 따라 형성된다. 기억의 생성은 비논리적이다. 왜 그 사실이 기억에 남게 되었는지, 그 기억은 실상의 원형인지, 아니면 그와 비슷한 사실에 대한 간접체험(들은 것을 나대로 해석하면서 상상력이 발동하여 다른 사실을 내 기억에 만들어놓는다)에 의한 것인지 구분이 확실하지 않다. 그러므로 증언에 의지하여 어떤 사건을 해명하는 일은 매우 조심스러워야 한다. 더구나 채록하는 사람들의 입장까지 증언에 포함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그 자료의 객관성은 매우 제한적이다.¹⁸⁾

역사는 증거에 의하여 시간을 복원하는 작업이면서 그 시간에 살았던 사람들의 의식의 복원 작업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확한 의미에서 역사는 살아있는 사람의 역사이고, 이미 과거로 흘러가버린 사람의 역사는 아니다. 그러나 제주4·3사건을 복원하는 데는 살아있는 사람의 역사로 끝나지 않고, 그 시대의 복원이면서 그 때 살았던 사람들을 복원해야 한다. 4·3은 과거로 흘러가버린 사건이 아니라 현재에 남아있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왜 60년이 지난 오늘까지 그 사건이 남아 있을까? 그 시대 사람들을 복원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즉 사건의 주체의 진실을 외면하고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필요(그것이 반공이데올로기든, 민족이데올로기든)에 따라 이해했기 때문이다.

또한 증언의 취약점은 증언자는 사실을 다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진정으로 그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사건이 너무 충격적일 경우에 대해 너무 생생하게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말하지 않고 잊어버리려 한다. 4·3사건의 실상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는

(18) 본인은 역사 인식에서 살아있는 자의 몫에 대한 문제를 소재로 「긴 혀 짧은 혀」라는 중편을 발표한 적이 있다. 소설집 『우리백』 문학과학지성사, 2011.

사람들도 있다. 그들의 침묵도 기록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증언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것도 그만한 이유가 있다. 아픈 과거 앞에서 우리는 이성을 잃기 쉽다. 피해 받은 자의 증언은 피해자의 측면에서만 이루어진다. 그것은 비난할 수 없지만 그것이 역사적 진실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 증언은 살아있는 자의 피해의식의 소산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그것이 보편적인 진실을 해명하는 자료가 되기에는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 즉 증언에 대한 검증, 자료적 가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증언의 역사를 복원하는 일은 조심스러워야 하고 더한 정직성이 요구된다.

또 증언의 문제점은 사건의 주체가 익명적일 경우와 다중적인 것만을 이야기한다는 데 있다. 사건에 대한 증언도 극히 부분에 머문다. 다음과 같은 예를 생각할 수 있다.

- (1) 어느 날 갑자기 지서에서 마을 남자들을 다 모이라고 해서 모였더니 토벌대가 와서 그들 중에 경찰관과 공무원 가족을 따로 세워두고 나머지는 모두 처형해 버렸다.
- (2) 그날 새벽에 빨치산들이 이장 집에 들어와 그 가족을 모두 납치해 갔다. 얼마 후에 그 이장 가족이 마을 뒷산 토굴에서 시체로 발견되었다.
- (3) 그날 산사람들이 습격을 왔는데, 우리 모녀는 피할 틈이 없어 밖거리 쇠막에 들어가 출단 더미 속에 숨어 있는데, 누가 와서 출단을 획 걷어내었저. 보니, 우리 동네 *** 이더라. 그는 얼른 출단을 다시 덮고 쇠막은 나가면서 “여기 아무도 없으니 얼른 다른 데로 가보자” 하더라. 그게 누군고 하니, 지금도 살아 있다. 우리 모녀를 살려주었는데도, 나는 이거 20년이 지나도 고맙다는 말도 못 했저.
- (4) 우리 아버지가 그 ***에게 살려달라고 사정하는 소리를 그 옆 바위틈에 숨어 있는 나는 들었수다. 그런데 그 ***는 아버지를 죽여버렸수다. 나는 그 죽인 사람을 압니다. 지금도 살아 있수다. 그런데 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수다. 그 원수를 어떻게 해야 할지 자신이 없수다.

(1)의 증언에서 중요한 것은 왜 지서에서 마을 남자들을 다 모이게 했는가? 그 때에 지서직원들은 누구이며 주임(책임자)은 누구인가, 이 사건의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런 문제는 증언하지 않았다. 증언자가 혹시 알고 있더라도 말하지 않을 수도 있다. 사건의 진정성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건과 관련된 다른 사건도 알아야 한다. 증언자는 그 부분을 모른다. 더구나 그 사건의 주체인 사람에 대해서 모르거나 알아도 입을 다문다. (2)의 경우에도 이 이장 가족을 납치해 간 빨치산들은 누구인가? 왜 그들은 이장 가족을 납치해 갔는가? 이장은 납치를 당해야 할 만한 일을 저질렀는가? 즉 특정 인물 ‘이장에 대한 사실’과 ‘납치자에 대한 사실’이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는데 필요하다. 그러나 증언자는 그 내용을 모르거나 알고 있지만은 말할 수 없다. 그런데 이러한 증언을 통해서 사람들은 마을 사람들은 죄없이 집단 학살되었고, 이장 가족은 빨치산에 의하여 무참하게 죽었다는 사실만을 증언한다. 이러한 사건이 왜 일어났느냐 하는 문제는 증언으로서는 해명할 수 없다.

4·3당시 제주에는 집단 학살 사건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 사건은 그 이전에 원인이 될 만한 작은 사건들이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 증언자들은 그 부분을 모르거나 알고도 증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구체적인 인물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그 사람들도 피해자인데, 후세 사람들은 그를 학살의 원인 제공자처럼 인식하기 때문이다. 사건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것은 학살이 아니라, 학살이 왜 일어났는가 하는 문제이다.

(3)과 (4)에서, 4·3사건에는 증언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생명의 은인이지만 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도 없었고, 원수이지만 세상에 내놓아 단죄할 수도 없는 일들이 너무 많다. 취재진의 녹음기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그 증언으로 이 사건을 이해하기는 멀고 멀다. 더구나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증언은 도식적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 어두운 시절에도 제사집이나 큰일집에서 4·3사건 이야기판을 벌렸는데, 거기에서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야기판이 증언의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아이들을 상대로 혁명가를 가르친 선생의 이름도 말할 수 있고, (3)이나 (4)와 같은 이야기도 말할 수 있고, 악질적으로 행세했던 경찰관의 이야기, 서북청년단의 이야기, 해안부락으로 내려가는 우리를 심문했던 그 아는 산사람의 이름을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듣는 사람이나 말하는 사람 누구도 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지도 미워하지도 않았다. 그 상황에서 듣는 사람(나)은 누구도 초등학교 선생, 악질적인 경찰관과 서북청년단원, 산사람, 아버지를 주인 산사람, 고모를 살려준 동네 청년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누가 자기 길을 선택했겠는가? 자기 선택에 의하지 않고 그 절정의 시기를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복원할 수 없다면, 제주4·3사건의 이해가 상생과 화해에 이를 수 없다.

객관적 자료가 아무리 풍부하더라도, 그것을 선택함에 따라서 역사의 복원은 달라질 수 있다. 더구나 제주4·3사건과 같은 역사적 사실을 이해하는 데는 많은 자료가 필요하다. 그런데, 어떤 자료에 더 가치를 두느냐, 또는 그 자료를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진다. 예전에 우연한 자리에서 4·3에 대한 연구 문제가 화제에 올랐다. 누가 당시에 객관적 자료에는 민가와 마을에 뿌려졌던 뼈라도 한뭉을 하지 않겠냐고 4·3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자에게 말했다. 그런데 그 4·3관계자의 말이 충격적이었다. 그 당시 뼈라 중에는 경찰에서 조작한 것이 많다는 것이다. 이쯤 되면 밝혀진 사태의 진상은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역사의 연구는 자료를 선택하고 체계화하여 자료 간의 논리성을 밝히고 그것에 의하여 역사적 사실을 복원하고, 그 복원된 현상에 대해서 해석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 연구자의 자의가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검증할 수 있는 것은 치열성과 정직성을 바탕으로 한 학자의 양식이다. 연구자는 얼마나 당대의 역사를 치열하게 인식하고 정직하게 기록하였는가? 치열성과 정직성을 검증하는 장치로는 연구 결과에 대한 책임이다. 그 책임의 중압을 본인이 자임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 4·3사건에 대한 전문 연구가가 필요한 이유가 있다. 더구나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의 익명성이 보장되는 연구기관, 그것도 임시로 만들어진 위원회에서 수행한다면 치열함과 정직성을 담보로 받기는 쉽지 않다. 더구나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이루어져서는 더욱 그렇다.

지금까지 4·3사건 문제를 담당한 기관에서는 조사 연구한 내용을 독립적이고 항구적인 연구기관에 넘겨서, 연구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는 학자들로 하여금 연구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자료들을 개인 연구자들에게 개방하여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역사적 진실을 훼손하는 요소들을 걸러낼 수 있을 것이고 연구의 객관성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4) 정부 주도의 제주4·3사건 규명의 문제점

정부가 나서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뒤따르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의미 있다. 그런데 그 일이 정부의 개혁의지에 의한 '역사바로잡기' 사업의 하나였다는데 문제가 있다. 역사적 사건의 실체가 정치 논리에 의해 밝혀질 때 우선 그 일에 대한 신뢰성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한시적으로 기한을 정하여 추진할 때에, '사업으로서의 성과 이상'을 기대할 수 없다. 잘못 이해되거나 또는 묻혀 있는 사건의 진상 파악은 어떤 정부의 정치 논리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정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바른 역사를 정립하는 정권 차원의 문제이다. 전자는 이데올로기적이지만 후자는 역사 그 자체의 문제로서 탈 이데올로기적이다. 더구나 일정 기한을 정해서 급조된 정부 산하 기관에서 그 복잡하고 방대하며 다층적인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일은, 더구나 그 규명의 의도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라는 전제를 두었을 때에 그 결과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정부에서 제주4·3사건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는다면 우선 그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부터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장치를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제주4·3사건만이 아니라, 해방공간과 한국전쟁 기간 동안에 한반도에서 발생한 모든 사건 (공식 전쟁사의 범주에 포함할 수 없는)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기관을 설립하는 일부터 시작했어야 했다. 어느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대한민국의 또 다른 역사를 연구하는 상설 국가기관이 필요하다. 이 기관에서 정부 수립 전후하여 발생한 사태, 예를 들면, 여순반란사건, 지리산 공비(?)토벌전, 거창 양민학살 사건, 보도연맹 사건, 각 지방에서 일어난 파업 사태, 전쟁 중에 여러 곳에서 일어났던 좌우익에 의한 주민 학살사건, 등등 기록되어 있지 않는 사건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연구하도록 하는 일이 필요했다. 그것은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만 주변적 역사 연구의 한 모델로서 그 결과에 대해서 신뢰하게 될 것이다. 비극적인 사태의 진실이 밝혀질 때에 우리는 역사의 실체를 바로 알게 되고, 우리 속에 잠재해 있는 이데올로기 망령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제주4·3사건의 연구가 장기간에 걸쳐 학술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동안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연구 결과도 포함되어야 한다. 방대한 자료집을 내는 것 이상으로 이 사건에 대한 다양한 계층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하여 그 위에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더구나 그 일은 학계의 전문가로 하여금 학자로서의 양식을 담보로 그 결과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모든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래야 연구 결과에 대해서 신뢰를 높일 수 있다. 그렇게 되었다면 정권이 바뀌어도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보완되고 다듬어

졌을 것이다. 그렇지 못하고 정권의 정책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신뢰를 얻는데 어려움이 있고, 다른 정권은 다시 역사의 문제를 정치이데올로기로 접근하게 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게 된다. 제주4·3은 중앙에서 관심이 덜하기 때문에 잠잠하는데, 아직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을 뿐이다. 교과서 집필만 해도 그것을 정권 차원에서 소위 진보적인 학자들을 동원해서 급조한다고 그것은 오래 지탱될 수 없는 것이다. 교과서는 어디까지 교과서여야 한다. 그 점을 간과하고 이데올로기적 차원으로 인식하고 추진했던 저의는 이해되지 않는다. 제주 4·3사건도 그러한 일련의 개혁의지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점이 많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정권 담당자들이 정치 권력으로 학문의 세계를 지배하겠다는 발상이다. 학자들이 권력 앞에 유약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연구비를 많이 주면 하고 싶지 않는 일도 한다는 사실을 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얻은 결과가 진실이 아닐 경우에 생명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국익에 반한다는 사실이 명백한데 정권은 그것을 외면한채 악용하고 있다. 그 일은 권력자들이 학문적 진실성에 대해서 무식하기 때문이고, 그 무식을 조장한 것은 역시 학자(?)들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정치가들의 단견과 정치 권력에 대한 지나친 신뢰, 그리고 정치 권력의 보호를 받아 돈과 지위를 얻으려는 학자들의 추한 모습이 합작하여 이루어진 결과이다. 이러한 학문적 풍토는 정권을 위해서도 학문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학문의 결과가 국가 사회를 위해서 바람직하게 쓰여져야 할 경우에, 그 학자는 지성인으로 (학술적 기능인으로서) 정부에 참여하고 일이 끝나면 다시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 학자는 자기 연구 결과의 사회화라는 그 범위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이것은 학자의 현실참여의 한계이다. 그러나 우리 경우는 불행스럽게도 정치권력과 유착됨으로 학자의 양식을 버리고 고귀한 그의 연구 결과까지 푸 대접을 받게 된다. 그것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손실이다. 제주4·3사건의 문제도 이러한 정치논리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는 데서 우려된다.

4. 제주 4·3사건에 대한 수난사적 이해와 주변성

제주 4·3사건은 저항적 측면과 수난사적 측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앞에서 논의한 대로 남로당계가 사건의 주도권을 잡고 (중앙당의 지시를 받았건 받지 않았던 간에) 남조선의 공산화를 위한 투쟁의 일환으로 일으킨 그 부분은 '저항사'로 볼 수 있다. 그렇다고 이 사건을 모두 그런 시각으로 인식할 수 없다. 사건이 확산되면서 주도세력은 섬 밖으로 도피해 버렸고 섬에 남은 자들은 생존을 위한 싸움을 해야 했다. 더구나 많은 사람들은 이념이나 사상의 차이도 없고, 은원도 없었는데, 그 시간에 거기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자기 선택과는 무관하게, 서로 미워하고 죽이고 죽는 관계에 있게 되었다. 이래서 제주4·3사건은 발발 동기는 저항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비극적인 내전 양상에 대해서는 수난사적 측면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저항적인 부분도 제주라는 주변지역의 문화 정치

역사성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수난사의 큰 울타리 안에 포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주변성의 논리로 제주 남로당계의 저항을 이해한다면 가능하다.

제주 남로당계가 해방 정국에 대처하기 위한 활동은 그러한 입론(立論)이 가능하다. 한 예로 중앙정세와는 달리 인민위원회가 해방정국에서 제주의 행정 주도권을 잡았다는 것¹⁹도 주변적 특성이다. 이 외에도 해방정국에서 나타나는 제주도의 특수성은 전국적인 정치 상황과는 달리 다소 이상주의적이다. 남로당 소장파들에 의해서 무장 봉기를 선택하게 된 것도, 그 이전에 입법위원 선거에 참여하여 당선된 것도 주변성의 한 양상이다. 다른 지역보다 공산주의의 인적 구성이나 조직과 여건이 취약함에도 무장 봉기가 일어났다는 것도 특수한 사안이다. 또한 제주사람들의 인적 구성, 특히 사건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던 이들이 제주사회에서는 지식인이었고 지도자였다. 중심부 계층인 그들의 신분이나 기질로는 프로레타리아 혁명을 주도할 인물이 아니라는 점도 주변성²⁰과 관계가 깊다.

19세기 말에 전국 각처에서 민중 봉기가 일어났으나 이재수난처럼 비슷한 처지에서 살아온 사람들끼리 광란의 살육을 벌이지는 않았다. 4·3사건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부분이 많다. 우리는 토벌대와 우익집단의 반 인권적 진압 작전에 모든 책임을 다 돌려버리지만, 그 이면에는 제주사람끼리의 갈등도 한몫을 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는 제주의 역사와 문화의 특수성인 주변성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으며, 이것은 제주의 근·현대에 일어난 이재수난과 4·3사건을 수난의 역사로 인식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렇다고 이 두 사건의 역사적 의미가 축소되지 않는다. 오히려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인간과 그 사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 즉 역사만을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 속에 살아온 사람들의 초상을 복원할 수 있다. 수난사의 입장은 가능하면 역사를 이념의 굴레에서 해방시켜 그 진실성을 훼손하지 않으려는 데 있다. 이러한 입장은 제주의 역사성과 섬의 지역성과 변방지역으로서의 제주의 문화 특성과 맥을 같이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것은 제주 역사가 주변부 역사의 특수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보편화할 수 있을 것이다.

역사를 이념 지향적으로 인식할 경우에 동시대의 실상과 그 안에 살았던 인간의 체취를 복원하는데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 연구자의 이데올로기나 동시대의 가치의 척도로 과거를 재단해서는 역사 속에 살아온 사람의 혼을 간과해 버릴 수도 있다. 즉 역사의 연구는 과거(역사적 사실)와 현재(연구자)의 만남이기에, 서로 다른 주체와 상황에서 공통적인 것을 찾아내어 한 시대의 역사적 진실이 보편성으로 자리잡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 역사는 사건의 역사로 끝나지 않고 사람의 역사가 되어야 하고, 과거의 역사로 끝나지 않고 현재의 역사이고, 미래를 향한 비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제주4·3사건에 대한 수난사적 인식은 그 당시의 제주의 사회와 그 안에 살았던 사람들의 혼과 모습을 복원한다는 의미를 갖게 된다.

(19) 보고서, pp,49-57.

(20) 주변성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할 것.

현길언 「제주 전설과 그 주변성」 『제주도 언어민속논집』 현용준선생환갑기념논총 간행위원회, 1992.

현길언 「소설의 주변성과 인문학적 위상」 『영주어문』 22호, 영주어문학회, 2011.

역사를 이념으로 인식할 때에 그 결과는 고성 삼별초 항목유적지에서, 유신 말기에 정치가 역사를 어떻게 조종했는가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뿐이다. 4·3공원과 그 희생자 추모사업도 노무현 정부 이후의 우리 학계와 사회에 팽만했던 ‘역사바로 잡기’의 한 예를 보여주는 수준에 머물 수도 있다. 희생자의 외로움과 억울함을 위로하는 것은 그들의 아픔을 그대로 보여주면 된다. 그들의 모습에 분칠한다고 위로가 될 수 있을까? 희생자들은 한번도 억울한데 두 번이나 그들을 이념의 사슬에 묶어 뒤서는 안 된다.

오키나와는 그들의 비극의 역사를 그대로 원형에 가깝게 보존하는 것으로 동시대의 아픔을 말한다. 그들은 큰소리로 반미와 반전을 말하지 않는다. 그들을 그 지경으로 만든 일본 정부와 미군에 대해서 증오나 울분을 토로하지 않는다. 역사적 실상은 오직 자료가 말해준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정밀하게 역사 현장을 치장하지 않고 보존한다. 오키나와 전쟁의 실상을 되도록 재현하는데 마음을 쓴다. 각 지역 문화원과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그 지역의 역사를 복원한다. 한 예로, 오키나와 전쟁 당시에 어느 한 마을을 그대로 재현해 놓는다. 마을의 각 가옥의 위치이며, 각 가옥마다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과 그 성분과 그들의 죽음을 기록해 놓았다. 당시 썼던 모든 유품들을 수집해서 그대로 보여준다. 일지 한권, 낡은 옷 한벌, 간판, 시민증, 그리고 그 당시 그 마을에 살았던 사람들의 사진(주민증의 사진)을 모아 두었다. 그들의 삶이 이 역사적 자료에 담겨있음을 말하고 있다.

수난사적 입장에서 제주의 역사를 이해할 때에 역사적 진실은 소통의 통로가 될 수 있다. 저항사적 입장은 역사적 가치를 소중히 하기 때문에 명분을 얻을 수는 있어도 이념을 달리하는 자들끼리의 소통을 방해한다. 이념은 상대적이다. 소통은 평화로 이르는 통로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지엽적이다. 사실은 이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진실이 문제가 된다. 고통스럽게 한스럽게 살았던 사람들일수록 자신의 진실이 그대로 전해지기를 기대한다. 이념의 분칠한 모습으로 전해지는 것은 당사자의 마음과는 거리가 멀다. 이재수 난이나 제주 4·3사건을 생각하는데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가 이것이다.